

민주인권기념관 건립과 운영,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

- 근현대사기념관과 식민지역사박물관의 사례 검토 -

조 세 열

민족문제연구소 상임이사

민주인권기념관 건립과 운영,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

- 근현대사기념관과 식민지역사박물관의 사례 검토 -

조 세 열

민족문제연구소 상임이사

01

들어가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2002년 초 한국사회의 기대를 받으며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 지 무려 18년의 세월이 흘렀다. 사업회가 출범하면서 많은 이들은 민주화운동역사관의 건립과 운영이 우선 과제의 하나일 것으로 당연한 기대를 품었었다. 그러나 반민주세력의 재집권 등 여러 가지 곡절을 겪으면서 오랜 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좌초 위기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낄는 지경에 이르렀다. 너무도 늦은 감이 있지만 민주인권기념관의 이름으로 이제 건립이 가시권에 들어온 듯해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사업이 지체되었다고는 하나 한 측면, 숙고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준비과정이 주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간 반민주세력은 끊임없이 과거사를 부정하고 역사도발을 서슴지 않았으며 지금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주화운동과 과거사청산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과 폄하를 일삼고 있다. 그래서 민주인권기념관에 거는 기대가 더더욱 클 수밖에 없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책임 또한 무겁게 다가온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두 개의 작은 박물관 건립에 참여하고 운영을 맡아 역사문화운동을 벌이고 있다. 하나는 강북구에 위치한 근현대사기념관으로 2016년 5월 17일 개관했다. 연구소는 설립 준비과정에서부터 참여하였고 현재 강북구의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이다. 다른 하나는 2018년 8월 29일 국치기념일에 개관한 용산구에 위치한 식민지역사박물관으로 시민성금으로 건립하여 짧은 기간에 작지만 알찬 박물관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규모나 성격 면에서 민주인권기념관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지만, 위 두 작은 박물관에서 얻은 소소한 경험과 시행착오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02

기념관으로서의 분명한
메시지 전달의 필요성

국가박물관이나 지역박물관 등 출발 자체가 포괄적일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억과 기념의 공간은 명칭에서부터 전시구성에 이르기까지 메시지가 분명해야 한다. 대외적으로 비치는 이미지를 포함해 전시 콘텐츠에서도 일관된 흐름과 뚜렷한 주제 의식이 필요할 것이다.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의 경우는 독립과 민주를 키워드로 삼았다. 북한산 자락에는 3·1운동의 발상지 봉황각과 국가관리 묘역으로 승격이 예정된 이준, 손병희, 이시영, 김창숙, 신익희, 김병로 등 16위 선열의 묘소가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그 아래 국립4·19민주묘지가 위치하고 있다. 독립정신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역사의 현장인 것이다. 그래서 당초 민족문제연구소는 명칭도 가장 상징성이 반영된 ‘독립민주기념관’으로 정하자고 제안했으나, 강북구가 근현대사기념관을 고수해 관철시킬 수 없었다. 결과적인 얘기이지만 민주인권기념관으로서는 유사 명칭을 피한 셈이 됐다. 근현대사기념관의 콘셉트는 독립정신의 계승과 민주주의의 수호라는 헌법정신에 맞추어져 있다. 3·1운동에서 전면적으로 제기된 반제국주의, 민주공화주의가 일제강점기 내내 독립운동의 지표가 되었으며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으로 이어졌고 이를 지키려는 민주항쟁이 4월 혁명이라는 맥락이다.

식민지역사박물관은 명칭 확정에서부터 크게 논란이 일어났다. 자학사관이라는 비판에서부터 시작해, 심지어 일본의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모함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수준의 반대가 있었다. 시민역사관, 민중생활사박물관, 일제침략사박물관 등 여러 안이 검토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식민지역사박물관으로 귀착되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식민지’ 시대를 정면으로 직시하자는 뜻이 작용했다. 일제의 불법적인 강제병합이었으므로 식민지라 호명할 수 없다는 주장은 모든 식민지 경영이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대대적으로 일본인의 조선 이주정책이 추진되었으며 700만이 넘는 동포가 디아스포라의 길을 걸었는데 식민지가 아니었다고 강변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전시 콘텐츠를 보면 왜 식민지역사박물관이란 명칭이 타당하지 금방 알 수 있다. 식민지역사박물관의 전시 내용은 크게 일제의 식민통치와 전쟁동원, 친일파들의 부역행위,

식민지배의 후유증과 일제잔재, 그리고 한일 시민사회의 식민주의 청산운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욕의 역사와 그 극복이 핵심 주제인 것이다.

민주인권기념관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또한 명료하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폭력과 인권탄압의 역사를 기억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화운동기념관과 민주인권기념관은 얼핏 유사한 명칭으로 보이고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인권문제를 다루는 것과 민주주의와 인권을 양대 가치로 수용하는 데는 큰 차이가 있다. 기념관의 방향성에 따라 전시 구상과 사업의 범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중점 과제가 무엇인지를 초기 단계에서 명확히 해야 과정상의 혼선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인권기념관이 들어설 남영동은 장소의 상징성으로 인해 인권적 측면이 한층 강조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불가분의 관계이기는 하나 장소성을 중요시하면 보존에 방점이 두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공간적 제약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현존 건물이 전시공간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데는 다수가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과 효율성도 감안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보존과 활용 양 측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해 보인다. 국내외의 유적지 실내 보전의 사례나 건축 공학의 기술 수준을 볼 때 지혜로운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03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에 관한 사고 지평의 확대

근현대사기념관은 동학농민혁명에서 4·19혁명까지를 다루고 있다. 그것은 기념관이 위치한 강북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독립운동과 민주화투쟁을 관통하는 민주공화주의의 역사성을 부각하고자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 즉 독립운동과 민주화 투쟁을 단절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식민지역사박물관은 일제 식민지배의 전체주의적 폭압성이 그대로 해방 후 독재정권의 권위주의 통치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친일청산의 현재적 의미를 조명하고자 했다. 즉 일본은 군국주의 세력을, 한국은 일제에 부역한 친일세력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온전한 정착이 지연되고 있다는 관점이다. 근현대사기념관과 식민지역사 박물관이 각기 한국근현대사의 빛과 그림자를 대조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역사 해석의 지향점은 결국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다.

민주인권기념관은 현재까지는 그 기념의 대상을 민주화운동에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자 피해자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정부수립 이후로 그 시기를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업주체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설립 배경을 돌아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민주인권기념관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산하기구라 할지라도 사업방향이 반드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의 제약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기념관은 성격이나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인권기념관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민주화운동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가 될 것이다. 따라서 기념관의 전시구성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물론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비중 있게 다루게 될 터이지만 시야를 넓게 가지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대 및 심화 과정을 포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민주인권기념관은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사상의 태동에서 반독재민주화투쟁은 물론 민주주의의 정착과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 제시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간 한국의 민주주의는 흔히 해방 후 서구로부터 도입된 이식 민주주의로 간주되어 왔다. 그런데

3·1운동 100년을 맞아 이 같은 인식에 전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3·1운동 95주년이던 2014년 3·1혁명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제국에서 민국으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후 매년 <독립운동과 헌법정신>, <기록으로 보는 3·1혁명>, <3·1운동의 혁명적 성격> 등의 학술행사와 함께 관련 전시회를 개최해왔다. 이런 작업이 지닌 일관된 문제의식은 3·1운동이 반제국주의 민족혁명인 동시에 반봉건적 민주혁명이라는 점이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가 올해 발간한 『한국 민주주의, 100년의 혁명』은 민주주의 외삽론을 비판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3·1운동에서 촛불항쟁에 이르는 세계 유례없는 ‘장기 혁명’을 통시적으로 연속선상에서 분석함으로써 그간 변혁운동의 세대 단절론을 불식하는 단서를 열었다. 역사적 경험 특히 공동체 전체에 각인된 변혁의 경험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미완이라면 완성의 끝을 향해 나아가면 될 일이다. 민주인권기념관은 이렇게 진일보한 역사해석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운영 주체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체계적인 작업을 거쳐 이론을 정립하였으니 앞장서 알리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04

건립과 운영의 선택과 집중

근현대사기념관과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과 운영에는 최소의 INPUT, 최대의 OUTPUT이라는 원칙이 적용되었다. 작은 공간과 적은 예산이라는 근본적인 제약이 있었으며 기획과 관리 인력의 부족도 작용했다. 근현대사기념관은 서울시와 강북구의 예산 지원으로 형편이 다소 낮지만, 식민지역사박물관은 건립기금은 물론 운영경비도 시민 성금으로 충당하다 보니 전시나 교육에 많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런 여건 아래서도 그나마 운영주체가 동일하여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해가며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적절한 비교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족문제연구소와 식민지역사박물관과의 관계에서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와 민주인권기념관의 향후 역할 분담이 어떠해야 할지 추정 해볼 수 있다. 식민지역사박물관은 ①일제강점기 전문 역사박물관 ②시민·청소년 역사문화 교육 공간 ③과거사 관련 종합 아카이브 ④국제 시민교류협력과 시민연대의 거점을 목표로 과거청산 시민운동의 구심 역할을 지향했다. 건립 단계에서는 식민지역사박물관이 전시 교육 자료수집 아카이빙을 모두 감당하고 민족문제연구소는 연구 조사와 실천운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구상했으나, 자원과 인력 등 현실적 여건이 미비하여 현재 식민지역사박물관의 자립적인 재생산의 달성은 답보 상태이다.

구상의 수준이지만 민주인권기념관의 사업 분야에는 전시 교육 아카이빙은 물론 조사 연구 나아가 국제 연대와 교류협력, 세대 간 전수와 소통, 피해자에 대한 치유의 기능까지 제시하고 있다. 명실공히, 민주 인권 분야의 모든 문제를 망라하는 본산으로 향후 지역에 건립되는 민주주의 관련 기념시설의 센터이자 허브의 역할까지 상정하고 있다. 이런 점은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 운동 초기 사업계획과도 상당히 유사해 보인다. 따라서 그 경험을 비추어, 하나의 방안으로서 방대한 과제를 하나의 기구로 집중시키는 것보다는 분야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치유센터 등 전문적인 기능은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업으로 해결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05

박제화된 전시의 지양

현재 민족문제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유물과 고도서만 해도 수만 점에 이른다. 식민지역사박물관의 상설전시관에는 그야말로 극히 일부만이 전시되어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소장한 자료는 훨씬 방대할 것인데 이를 어떻게 민주인권기념관의 전시구성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것인지도 난제가 아닐 수 없다. 운영 주체로서는 가급적 컬렉션의 많은 부분을 공개하고 싶은 유혹이 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전시 분량이 많다고 해서 그에 비례하여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전체를 관통하는 줄거리가 있어야 하며 메시지가 분명해야 한다. 또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법이 접목되어야 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이미 거대한 컬렉션뿐만 아니라 다량의 구술 영상과 DB도 확보하고 있다. 생생한 서사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며 이것이 스토리텔링에서 다른 어떤 박물관보다 비교우위를 가지는 부분이다. 구술 영상은 단순히 모니터에 이를 재생하는 방식보다는 비디오아트 등 예술적으로 재창조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민주항쟁의 역사를 넘어서 가능하다면 독재정권하의 민중생활사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장발과 미니스커트 단속이나 금지곡 금서 등 일상사에 대한 전체주의적 통제를 예시하는 것이 독재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에게는 논리적인 설명보다 독재정권의 속성을 쉽게 이해시키는 방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패널이나 캡션에서도 설명식의 단조로운 텍스트를 지양하고 증언이나 일기 시 소설 등의 구절을 따오는 것이 훨씬 공감이 빠를 수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소장 자료에는 전단·문서·문헌류가 많겠으나 가능한 한 실물자료나 시각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문학 음악 미술 사진 영상 등이 배합된 종합예술의 느낌을 들게 하면, 그 전시는 기법 상으로는 성공이라 하겠다. 상설전시관을 돋보이게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획전시의 활성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시의성 있는 기획전시는 유력한 홍보 수단이자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최근 각종 박물관과 기념관에는 각 학교 학생들의 체험학습이나 동아리 활동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인권기념관의 주목적 중 하나가 미래세대의 민주시민 교육인 만큼 다양한 형태의 체험학습을 고안해야 한다. 다양한 전시 기법에 쌍방향의 소통이 결합할 때만이 화석화된 박물관이 아닌 생동감 있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06

강력한 네트워크의 구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외면하기 어려운 대의명분 아래 출범하였음에도 역동성 있는 조직으로 나아가지 못한 원인으로 지지기반의 부재를 거론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이 지체된 배경에는 주체 또는 지지 세력이 확고하게 형성되지 못한 탓도 있을 것이다.

민족문제연구소의 활력이 1만 2천여 명에 이르는 회원들에게서 나오는 것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월 회비를 납부하는 이들 중 일부 열성회원들은 지부에 참여하여 실천운동에까지 나아가고 있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와 국정 한국사 교과서 저지운동 때 전국 각지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한 조직의 하나가 바로 민족문제연구소 지부들이었다. 식민지역사박물관은 개관 1년이 조금 지난 지금까지 한 차례도 조직적인 후원회원 모집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인 월 회비 납부자가 500여 명에 육박할 정도로 시민들의 성원을 받고 있다. 친일 문제나 한일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있고 그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한편으로 연구와 실천 양 측면에서 쉽지 않고 움직이고 이슈를 제기하는 왕성한 활동도 한몫을 했으리라 짐작된다.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에는 일본의 진보적 학계와 과거사 관련 시민사회단체들도 조직적으로 참여했다. 그들은 '식민지역사박물관과 일본을 잇는 모임'을 창설하고 대대적인 모금운동과 자료기증운동을 전개했다. 당초 개관 이후에는 해소할 예정이었으나 참여자들의 총의로 상설기구로 전환하여 지원과 홍보를 아끼지 않고 있다. 개관 초부터 일본인 관람객이 끊이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학교나 단체의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다소 민망한 자량을 늘어놓은 까닭은 민주인권기념관도 국내외의 지지 아래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이다. 만여 명이 아니라 백만 단위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이들이 민주 인권의 주역으로 거듭날 때 진정한 민주화 시대가 열릴 것이다. 물론 민주인권기념관이 민간단체들과 같은 방식을 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촛불' 국면에서도 드러났듯이 민주화운동도 전환기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엘리트 운동은 종언을 고했으며, 참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생활민주주의의 개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이다. 민주인권기념관의 입지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이 지형에서 민주인권기념관이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모색해야 하리라 본다.

회원의 확산은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각종 행사나 이벤트로도 이루어지지만, 그 중심 무대가 인터넷으로 옮겨간 지 이미 오래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웹 기반의 콘텐츠 생산이나 유튜브, SNS를 활용한 홍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뉴스레터, 카드뉴스, 웹진 등 모든 방식을 동원해 실험하고 잠재적 수요를 효과적으로 끌어내야 할 것이다. 자료수집도 단순한 컬렉션의 확대가 아니라 그 자체로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기증자가 이로써 참여의 주체가 되고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회원 외의 네트워크 구축은 교수·연구자, 교사, 활동가 등 전문가 그룹과 시민·학생 등 수요자 그룹, 외국의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해외교포를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08

나머지 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인권기념관 건립과 운영의 주체로서 국민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건립의 전 과정과 운영 방향을 소상히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가들의 자문도 필수적이지만 공청회 등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과정도 거치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하다.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의 동력을 확보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잘 알려져 있듯이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하고 친일청산운동을 전개하는 한편으로 일제 강제동원의 진상을 규명하고 전쟁범죄를 추적하는 데에도 앞장서 왔다. 나아가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박정희를 경제성장을 이뤘던 민족중흥의 영도자로 미화하면서 친일과 독재를 옹호하는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을 비롯한 반민족 반민주 세력과도 정면으로 맞서 싸워왔다. 근현대사기념관과 식민지역사박물관도 온갖 형태의 역사변조를 막는 보루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정착과 인권의식의 확산에 기여할 민주인권기념관의 지향하는 바도 같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긴밀한 교류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향해 전진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민주인권기념관이 깊이 공감하고 다시 찾게 되는 그리고 주위에 관람을 권하고 싶은 기념과 기억을 위한 소중한 공간이 되길 소망하면서 힘찬 활약을 기대해마지 않는다.

참고문헌

3·1혁명기념사업회, 2014, 『제국에서 민국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2019, 『한국민주주의, 100년의 혁명 1919~2019』
한울

이영제, 2019,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의 의미와 과제」 『Issue & Review on Democracy』 39

조세열, 2018, 「3·1혁명 100년, 그 역사적 무게를 생각한다」, 프레시안

2015,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의 필요성과 전망」 『식민지역사박물관과 일본을 잇는 모임 결성
집회 자료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프랑스혁명에서 ‘촛불혁명’까지: 혁명의 세계사를 향하여』

민주인권기념관 건립과 운영,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 - 근현대사기념관과 식민지역사박물관의 사례 검토 -

KDF REPORT : Issue & Review on Democracy

발행일 2019년 12월 1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이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로서 연구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